

“가격표 찍으면 안돼요”... ‘헬스장 정찰제’ 유명무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시행 1년

체육시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는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 제재에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체육시설 운영 업종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보 제공 불성실·거부 ‘여전’

작년 위약금 등 피해구제 91건

위반 시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종업원 등 개인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고시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시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들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계도 기간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여전히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관내 체육시설들은 새해를 맞아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며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지만, 할인가 외에 구체적인 요금체계나 환불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시설 내부와 홈페이지에도 가격표가 기재된 시설은 손에 꼽았고, 전화를 해야 안내하거나 방문 상담을 유도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대학생 장 모씨(21)는 “대부분의 헬스장이 홈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가격을 표시하는게 불법인 줄 알았다”며 “한 곳은 방문 상담을 하고 나서야 가격을 안내하더니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고 가격표 사진도 못찍게 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필라테스 시설을 옮긴 직장인 김 모씨

(25·여)는 “여러 곳의 가격과 시설을 비교한 후 결정하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공시한 헬스장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구체적인 요금 체계를 적어놓지 않아 공휴일이 있거나 휴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분개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91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86.8%(79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6건), 품질 불만(2건), 기타(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설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6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지역 체육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전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헬스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격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공문을 업체에 발송하도록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경우 의무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지만 소비자 피해 등을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혜린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6일 오전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계묘년 새해맞이 으뜸孝남구 합동세배식에서 주민들이 덕담을 나누며 서로 인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빌라왕’ 수사 속도...검·경 협의체 구성

광주 경찰이 최근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체를 가동한다.

광주경찰청은 26일 최근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사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

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 협의체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연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광주지역 검찰 경찰 협의체는 우선 ‘광주 빌라왕’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통전세’ 사기범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0대 정 모씨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입차해 ‘강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를 규명해 구속했다. /최환준 기자

풍암호수 지하수개발 신청 취하

주민 “의견 수렴 전 선부른 진행”

개발업체, 협의체 논의까지 보류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체가 허가를 앞두고 있던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을 취하했다.

26일 서구에 따르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20일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취하서를 서구에 제출했다.

서구는 민간 사업체가 개발 허가를 취하함에 따라 우선 호수 수질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안은 호수 주변 5개 지역 내 8개 구멍에서 매일 895t의 지하수 물을 퍼 올려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안은 지난 2019년 풍암호수공원 공무원·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으로 구성된 수질개선 전담팀에서 제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전담팀 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서구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했다. 서구는 당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하수 허가 절차가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강행’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협의체를 구성해 전담팀 제시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지만 의견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이어지자 서구는 지난 19일 풍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동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이러한 의견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전달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주민협의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 지하수 개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혜린 기자

전남교육청, 인사행정 공정·투명성 높인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23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능력과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 조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를 운영키로 했다.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배치하고 장기간 근무를 유도함

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통과 공감의 인사 복지 실현을 위해 ‘리버스(reverse) 멘토링제’도 도입한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젊은 직원이 멘토가 돼 선배 공무원을 코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치유센터를 동부 권역에도 1곳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 소나무 숲
- ▶ 장성댐 , 등산로 (남동향)

100평,150평,200평,700평 (분할 가능)



010-2614-9801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평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주 광산구 박호동(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전남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010-2614-9801